



1. 바바 기미히코(馬場公彦), 『전후 일본인의 중국상 : 일본 패전으로부터 문화대혁명·일중수교까지』(戦後日本人の中国像 : 日本敗戦から文化大革命・日中修交まで), 東京 : 新曜社, 2010)
2. 이노우에 마사유키(井上正也), 『일중 국교정상화의 정치사』(『日中国交正常化の政治史』, 名古屋 : 名古屋大学出版会, 2010)
3. 도쿄재단(東京財団), 『일본의 대중국 안전보장전략 : 파워시프트 시대의 '통합'·'균형'·'억지'의 추구』(『日本の対中安全保障戦略 : 統合・バランス・抑止の追求』, 東京 : 東京財団, 2011. 6.)

특집서평

# 일본이 본 중국, 일본 속의 중국

이동준

\* **지은이 | 이동준** 호호쿠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법학박사). 한국일보 기자 및 일본학술진흥회 외국인 특별연구원을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로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제정치 및 국제관계사를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未完の平和: 米中和解と朝鮮問題の変容, 1969~75年』(東京: 法政大学出版局, 2010), 공편서로 『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集』(東京: 現代史料出版, 2010~) 등이 있다.

일본인에게 최근 1, 2년은 ‘차이나 쇼크’와 더불어 일본의 상대적 쇠락을 새삼스레 통감하는 시기였다. 2010년에 발표된 국내총생산(GDP) 규모상의 일중 역전과 동년 9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중국어선 충돌사건에서 일본정부가 보여 준 일방적 굴복, 올해 3월 11일의 동일본 대진재 사태를 통해 적나라하게 노출된 일본사회의 총체적 모순은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퇴조를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최근 일본 매스컴에 범람하는 다분히 선동적인 중국 이미지는 ‘대국’ 중국의 대두에 대한 위기의식의 표출임과 동시에 일본의 상대적 박탈감의 노골적 반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일본의 중국담론은 중국만이 아니라 일본 자신의 이미지가 투사된 스크린과 같은 의미공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이켜보건대 섬나라 일본에게 중국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거인이 결코 아니었다. 전전, 전후를 막론하고 일본에게 중국은 언제나 경외로우면서도 부담스러운 존재였고, 당연히 외교정책의 핵심적 상수를 차지했다. 중국은 누구이고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과거 일본의 최대 화두였고 현재와 미래의 피할 수 없는 난제이다. 이와 관련, 전후 일본의 대중국 인식 및 정책을 역사적으로 조망한 팔목할 연구성과가 최근 잇달아 발간된 것은 중국을 객관화하기 위한 일본 학계의 저력을 보여 주는 반가운 일이다.

바바 기미히코, 『전후 일본인의 중국상:일본패전으로부터 문화대혁명·일중 수교까지』(馬場公彦, 『戦後日本人の中国像:日本敗戦から文化大革命・日中修交まで』, 東京:新曜社, 2010, 이하 『중국상』으로 표기), 이노우에 마사야, 『일중 국교 정상화의 정치사』(井上正也, 『日中国交正常化の政治史』, 名古屋:名古屋大学出版会, 2010, 이하 『정치사』로 표기)는 일본 학계의 중국 연구가 바야흐로 1970년대 이후 단계로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둘 다 박사학위 논문을 근간

으로 한 700쪽이 넘는 대작이며, 1차 사료에 기초한 실증연구와 역사적 성찰이 돋보이는 노작(勞作)이다.<sup>1)</sup> 둘은 공히 일본 패전 이후 1972년 일중 국교정상화에 이르기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자가 ‘일본인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주제로 하는 반면, 후자는 일본의 중국정책을 국제정치적 영향과 국내정치의 대립이라는 변수를 통해 재고한 것이다. 따라서 본 서평에서는 일본의 중국관 및 정책을 통시적으로 조망해 보기 위해 상기 두 책에 더해 일본의 대표적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도쿄재단이 최근 제시한 정책제언 보고서 『일본의 대중국 안전보장전략: 파위 시프트 시대의 ‘통합’·‘밸런스’·‘억지’의 추구』(『日本の対中安全保障戦略: ‘統合’・‘バランス’・‘抑止’の追求』, 東京: 東京財団, 2011년 6월, 이하 『안보전략』으로 표기)<sup>2)</sup>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분열된 전후 일본의 중국관

전후 일본은 중국을 오인한 것일까. 기실 일본의 전후는 전전의 잘못에 대한 통절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했어야 했다. 그러나 일본인에게 전후는 과거 침략의 역사를 잊기 위한 망각의 시간이었고 오히려 중국과 맞서면서 망각을 정당화하는 세 월로 채워졌다. 일본은 이른바 요시다(吉田茂) 라인을 정책적 기반으로 삼아 안보적으로는 철저히 미국에 의존하면서 스스로는 전후복구와 경제발전에 매진하였다.<sup>3)</sup> 한국전쟁이라는 열전과 이후 심화한 냉전구조 속에서 일본은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의 침병으로 자리 잡았다. 이 기간 중국 역시 미 제국주의와 일본 군국주의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sup>4)</sup>

1) 이노우에는 일본 국제정치학계의 거목으로 평가받는 이오키베 마코토(五百旗頭真) 고베대학 명예교수(현 일본 방위대 총장)의 외교사 세미나 출신으로 현재 가가와(香川)대학 법학부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바바는 출판사 편집자라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로 와세다대학 대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2) 이 보고서는 <http://www.tkfd.or.jp/adminr/files/2011-03.pdf>에서도 열람가능하다.

3) 남기정은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자국의 안보를 담보하는 전후 일본을 ‘기지국가’로 규정하였다. 南基正, 「朝鮮戦争と日本: ‘基地国家’における戦争と平和」(東京大学博士論文, 2000) 참조.

4) 예를 들어 1950년 2월 중국이 소련과 체결한 중소동맹조약은 “일본제국주의의 부활 또는 일본국의 침략 또는 침략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일본과 연합하는 국가의 침략적 행위를 공동으로 방지할 것을 결의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 안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일본인의 중국 인식은 결코 확일적이지만은 않았다. 냉전체제 하의 일본의 중국관은 국제정치의 파워게임에 희롱당하면서 끊임없이 당파적 사고에 따라 분열되었기 때문이다. 스탈린 비판, 중소 대립, 중국·인도 분쟁, 중국의 핵실험 등 대륙에서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일본의 중국 인식 또한 라오동을 쳤다. 그 중에서도 일본인의 뇌리에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은 아마 중국의 문화대혁명이었을 것이다. 1972년 2월 나가노현에 있는 휴양시설 아사마 산장을 점령한 마오쩌둥(毛澤東)주의 연합적군파 대원들은 너스레를 떨며 경천동지의 뉴스조차 접하지 못한 채 동료 14명을 자아비판 명분으로 무참히 살해해 암매장했다. 중국 국내의 권력투쟁을 일본 혁명의 모델로 오인한 대가는 너무나 잔혹했다.

그렇다면 이같이 복잡다단하게 표출된 전후 일본인의 중국관은 어떠한 의미로 채색될 수 있을까. 바바의 『중국상』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책이 유니크한 것은 논단이라는 공론(public opinion)의 영역에 표출된 다양한 지식인의 중국에 관한 언설과 그 논조의 배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의 분석대상은 일본 패전의 해(1945)부터 중일 수교에 이르는 1972년까지 일본 국내에서 생산된 『문예춘추』(文芸春秋), 『세계』(世界), 『중앙공론』(中央公論), 『개조』(改造), 『제군』(諸君) 등 이른바 ‘종합잡지’ 24개에 게재된 2,554건의 중국관련 기사(혹은 논문)이다. 저자는 이를 이하와 같이 6개의 시기로 구분해 잡지별 기사게재 건수를 일람한 뒤 ‘전문성-대중성’을 종축으로, ‘좌파-우파’의 성격 구분을 횡축으로 잡아 각 잡지 및 논자의 논조를 객관화하는 데 성공했다. 저자는 이 연구방법을 중국상을 둘러싼 전후 일본의 언설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중국 인식경로’라고 칭했는데, 일견 평범한 수법인 듯하지만 엄청난 노력과 집념이 없이는 완결하기 어려운 방법론임이 분명하다.

이 책은 크게 시계열적으로, 제1장 전후 일본논단의 신(新)중국상(1945~50), 제2장 중소의 ‘평화공세’에 동요하는 일본논단(1951~55), 제3장 일중 국교회복론을 둘러싼 균열(1956~64), 제4장 문화대혁명의 충격(1965~68), 제5장 문화대혁명의 파문(1969~71), 제6장 일중 국교회복과 역사문제(1971~72) 등 6개

〈표〉 중국담론의 속성과 추이 개념도

| 중국론자의 속성 / 연도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
| ① 사회주의계 친중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구미(歐美) 저널리스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정재계 친중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중국전류 일본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반공 중국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반중국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현지 저널리스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현대중국 연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사료리스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 신좌파활동가·이론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⑪ 현대중국문학자/작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 ⑨의 시료리스트는 전전(戰前)의 한학, 동양학, 중국학 등이 애용하던 문헌학적 학술연구 방법으로 중국을 연구하는 학자군을 칭함(맹자 주)

주2 : 화살표의 굵기는 관련 기사의 게재 건수를, 화살표의 농도는 존재감의 강도를 나타냄

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시기구분은 주로 중국 및 일본 국내외의 정세변화를 반영한 것이지만, 저자는 각 시기에 대해 위에서 거론된 종합잡지의 중국 관련기사를 ‘중국 인식경로’ 분석을 통해 개념화하고, 동시대 중국을 둘러싼 논단의 흐름과 이와 연동된 관련 잡지의 휴·폐간, 신간이라는 미디어 업계의 부침까지 설명했다. 따라서 이 책은 일중관계에 관한 한 지금껏 주류를 이뤘던 국제정치학적 연구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비국가적 요인인 민간의 매스미디어의 존재와 기능에 착목한 문화사적 연구 성과라는 독특한 입지를 개척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의 압권은 저자가 결론적으로 제시한 ‘중국담론의 속성과 추이 개념도’라는 제목의 한 쪽의 표이지 않은가 싶다. 전후 일본에 존재해 온 다양한 스펙트럼의 중국론자들을 일본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계 친중파, 정·재계의 친중파, 반공 중국론자, 현대중국 연구자 등 11가지의 카테고리 유형화하여 이들이 제기한 중국 담론의 명멸을 일목요연하게 그렸다(『중국상』, 411쪽 참조).

요컨대 저자에 따르면 전후 일본인의 중국상은, ① 이론화 지향과 이상주의적 성향의 신중국상(1945~50): 현상분석형 인식경로와 학리연구형 인식경로의 병존으로부터 당파적 사고형의 인식경로로 → ② 중소의 ‘평화공세’에 동요한 논단(1951~55): 평화공존·비동맹 중립을 지향하는 ‘아시아연대형 인식경로’ → ③ 일중 복교론이 주도하는 가운데 논단의 균열(1956~64): 일중 복교를 지향하는 ‘지령호응형 인식경로’ → ④ 문화대혁명의 충격(1965~68): 신좌익운동가의 ‘혁명동조형 인식경로’와 중국 연구자의 ‘내발적 발전 중시형 인식경로’ 및 ‘객체관찰형 인식경로’ → ⑤ 문화대혁명의 파문(1969~72): ‘혁명동조형 인식경로’의 소실과 ‘객체관찰형 인식경로’의 활성화 단계를 거쳐 왔다.

주목되는 점은 종합잡지라는 일본 특유의 잡지 형식을 통해 형성된 중국상이 일부의 중국전문가나 연구자에 의해 독점되었던 것이 아니라 넓게 독자나 시민에 개방되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대중성이나 전문성의 차이, 좌우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중국이라는 의미공간을 둘러싼 언설이 활기를 띠었고 일본 나름의 중국상이 형성되고 사라져 왔다. 이 점이야말로 이 책이 제시한 중국담론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 가장 유력한 근거일 것이다.

다만, 저자도 종장에서 지적했듯이 일중국교정상화 이후 일본 국내에서 종합잡지의 담론 형성력은 현저히 감퇴했다. 실제로 이 책이 거론한 세번째 시기(1956~64)에는 종합잡지가 8종이나 탄생했으나 이 가운데 지금까지 남은 것은 2종뿐이다. 이 같은 종합잡지의 위축과 동시에 진행된 TV 등 영상매체의 득세가 논단의 쇠퇴 및 공론의 축소, 선동적 중국상의 확산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자에게 묻고 싶다.

## 전후 일본의 대중 리얼리즘

바바의 『중국상』이 전후 일본의 중국담론사를 다뤘다면 이노우에의 『정치사』는 동시대 일중관계를 방대한 1차 사료에 근거해 세밀하게 풀어헤친 역사서이다. 이 책은 종래의 ‘우호적 사관(史觀)’이 주류를 점했던 일중관계사 연구로부터 거리

를 두고 미일안보체제와 냉전, 유엔외교 등의 요인들이 교착하는 가운데 표출된 전후 일본의 대중정책의 주체성과 제약성을 나름대로 균형 있게 묘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전후 중일관계를 움직였는가. 저자에 따르면 타이완문제였다. 사실 종래의 연구에서는 일본과 타이완의 관계를 일중관계 정상화의 희생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서론에서 “기존연구는 왜 일본은 미중접근이 진행 중일 때 전략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저자는 이어 타이완의 국민정부에 대한 입장이 일본의 대중정책을 규정해 왔고, 결국 일본은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동의를 표명”(不同意の同意)하는 엉거주춤한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결착을 회피함으로써 일중국교정상화에 골인하고 말았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일본의 이 같은 애매모호한 선택은 현재에 이르는 일중관계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의 불씨가 되었다.

이 책이 제기한 타이완문제란 ①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할 때 타이완과의 국교관계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라는 이른바 ‘중국 승인’문제(‘두 개의 중국’ 문제), ② 중국 대륙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정치체제로서 타이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타이완 확보’의 문제(‘하나의 중국, 하나의 타이완’론) 등 두 가지이다. 여기서 저자는 일본정부의 대중정책이 1960년대 후반 이후 후자 쪽으로 중심이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특히 저자는 일본 국내정치의 다이너미즘에 착목, 외무성과는 다른 ‘비공식적 행위주체’가 대중 교섭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진단하는 한편, 동시에 이 같은 ‘다원외교’를 일원화하기 위한 외무성의 다각적 시도를 검증하는 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다.

기실 전후 일본의 중국정책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라는 국제정치적 제약은 물론이고 일본 국내정치, 특히 보수세력 내부에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으며 동요하기 일쑤였다. 바바의 『중국상』이 중국담론의 균열과 분산을 지적한 것처럼 일본정부의 대중정책 또한 일관성이 없었다. 외무성 내에서는 ‘법리’를 강조하는 조약국과 대미관계를 최우선시하는 현실주의자들 사이

의 인식의 간극이 상당했다. 여기에 저자가 미국 측의 1차 사료를 통해 새롭게 규명한 것으로 평가되는, 외무성의 중국전문가들의 입김이 중국정책의 입안 때마다 강하게 작용했다. 더욱이 중국 측의 의중을 수용해 ‘우호 상사’의 존재를 묵인하면서 대중 무역의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통산성과 중국 측의 ‘우호 무역’론을 견제하고 정부 차원의 일원적 통제를 기하고자 한 외무성과의 이른바 성청(省廳)간 이익 갈등도 만만찮았다.

이같이 복잡다단했던 정부 내의 중국론은 대중정책의 혼선과 정치지도자의 시행착오로 이어졌다. 요시다 총리는 미국의 중국 봉쇄정책에 동조하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 반공주의적 정치공세로서 중국대륙에 대한 ‘역삼투’(逆滲透)를 통해 공산주의 체제의 전복을 모색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시다 총리의 ‘무모한’ 대중 노선에 대해 외무성은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측은 국민당 정부가 중국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권으로서의 국부(國府)에 불과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조약으로서 구현하는 데 실패했다. 때문에 이후 일본은 ‘두 개의 중국’이라는 ‘잘못된’ 논리의 늪에 빠졌고 결국 대륙 중국과의 국교 수립을 스스로 차단하고 말았다고 저자는 진단했다. 요시다의 뒤를 이은 하토야마(鳩山一郎)와 이시바시(石橋湛山)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수립에 관심이 많았지만, ‘두 개의 중국’이라는 이미 자리 잡은 대중정책의 기본노선을 뒤집지는 못했다. 이같이 엉겨주춤했던 일본정부의 중국정책이 일본인의 상인 기질과 타협해 태동한 것이 지금도 유효한 ‘정경분리’라는 그럴듯한 논리였다.

이 책의 5~6장에서 전개되는 사토(佐藤榮作) 정권의 중국정책에 대한 분석은 흥미롭다. 우선, 사토가 취임 직후 예상 밖으로 ‘두 개의 중국’을 부인하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 수수께끼에 대해 저자는, 사토가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沖縄)와의 ‘분단’의 비극을 해소하겠다는 정치적 소신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동일민족의 분단, 즉 중국 분단의 고착화에도 정서적으로 반대했을 수 있다고 추론했다. 그 결과로서 사토는 대중 교섭을 염두에 두고 ‘하나의 중국, 두 개의 정부’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은 물론이고 사토를 제외한 누가 보아도 ‘두 개의 중국’론을 되풀이하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사토의 중국정책은 애



초부터 중국접근을 스스로 거부하는 자승자박이 되고 만다. 실제로 다른 한편으로 사토는 국부의 국제적 지위 확보를 중시했고 경제원조를 강화함으로써 타이완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타이완화'를 모색했다. 사토는 당초 시도했던 대중 긴장완화 정책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돌변해 타이완 방문을 강행하고 오키나와 반환 시에는 이른바 '타이완조항'을 수용했다. 이 같은 소신과 행동의 불일치는 미중 접근 이후 사토가 진정으로 대중 국교정상화를 모색하고자 했을 때 일본 외교의 발목을 잡았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혼선을 거듭했던 전후 일본의 대중정책은 실패했는가. 일중 교섭의 최대쟁점은 저자의 지적대로 타이완문제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배상문제와 미일안보동맹·주일미군 문제도 민감한 이슈였다. 하지만 이상의 세 가지 쟁점 가운데 후자의 두 가지는 일중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쟁점화하지도 않은 채로 일본의 주장이 거의 그대로 관철되었고, 타이완과의 관계조차도 실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수습되었다. 일본으로서는 타이완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지만 타이완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희망한 중국 본토와의 외교 관계 회복이라는 대어를 낚았다. 더욱이 일본은 자국의 안보에 필수적인 '타이완 확보', 즉 중국에 의한 타이완 흡수를 막겠다는 목표를 미국이 이루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제로 미국은 그때 이후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타이완을 '확보'하여 왔다.

저자는 일본이 이처럼 '성공적으로' 대중관계를 복원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평자의 견해로는 일중관계가 타이완문제로 수렴되고 정치적 타협에 의해 수습된 이면에는 미중관계라는 보다 큰 전략적 이해관계가 존재했다고 본다. 가령 당시 중소분쟁의 외중에 심각한 안보위기에 직면해 있던 중국은 경제적으로 대국화한 일본이 군사적으로 타이완에 재진출할 수 있다는 설상가상의 악몽에 시달렸다. 여기에 마침 베트남전쟁의 수렁에 빠져 있던 미국은 닉슨 독트린으로 대변되는 '아시아로부터의 후퇴'를 모색하면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 같은 전략적 이해관계의 교착상황 속에서 추진된 미중화해의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의 일본위협론을 역이용해 ‘일본 관리’론을 제기했고 이에 중국이 동조함으로써 타이완문제와 한국전쟁 전후처리 문제 등이 주변화한 것이 아닐까.<sup>5)</sup> 요컨대, 경제대국은 필연적으로 군사대국화할 것이라는 미중 양국의 현실주의적 ‘예측’이 실제로는 그럴 의향이 전혀 없었던 일본의 ‘환영’(幻影)으로 작용, 일중교섭에서 일본에 유리한 형식의 국교정상화가 실현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현재 중국이 경제대국이 되고 군사대국화한 ‘현실’에 대해 일본식 리얼리즘은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일까.

### 일본의 중국관 = 일본의 미래 자화상

바바와 이노우에가 조망한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에게 중국문제는 아시아주의적 지향과 서구주의적 이익의 중간지점 정도에 위치한, 고민스럽지만 그 런대로 견딜 만한 문제였다. 여기에는 패전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전후 복구를 이루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일본의 저력과 상대적 우월감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이 자신감은 서서히 상실감으로 바뀌었고 어느덧 중국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도쿄재단의 정책보고서 『안보전략』은 눈앞의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온 중국에 맞서 일본의 생존을 모색하기 위한 처방전이다.

보고서는 우선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세계적 차원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간의 세력전이(power shift)가 리얼하게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경제력이 지역 시장의 곳곳에 침투함으로써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중국의 눈치를 보며 공존·공영하는 정치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며,<sup>6)</sup> 일본 또한 중국의 경제적

5) 이 점에 대해서는 李東俊, 『未完の平和 : 米中和解と朝鮮問題の変容, 1969~75年』(東京 : 法政大学出版局, 2010), 110~117, 160~167쪽을 참조.

6) 중국의 대두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가령 데이비드 강은 주변국들이 밸런싱(balancing, 중국에 대한 세력균형 행위)보다는 밴드왜거닝(band-wagoning, 중국의 세력확대에 영합하는 행위)의 경향이 강하며 이 같은 행위가 지역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데니 로이는 주변국들이 중국의 대두에 대해 밴드왜거닝을 강화하면서도 군사, 정치적으로는 제한적으로나마 밸런싱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David C. Kang, “Getting Asia Wrong: The Need for New Analytical Framework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4(Spring 2003); Denny Roy, “Outtheast Asia and China: Balancing or Bandwagoning?”,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27, no. 2(August 2005).

자장 안으로 흡입될 우려가 제기됐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군사적 대두로 인해 주변국과의 긴장도가 현저히 높아진 가운데 중국의 핵심적 이익과 관련된 문제영역에서 일본이 연루되거나 방기될 가능성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판단을 각종 통계자료와 정치학적 입론에 기초하여 설득력 있게 개진한 뒤 세계경제의 동향, 중국 국내 정치 등 수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정치가 점차 ‘미중균형을 향한 대립 혹은 협력의 나선형 구조’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즉, 미중 간의 세력관계는 현재의 미국우위에서 점차 미중균형으로 전이되는 ‘하방 나선형’(down spiral) 구조인데, 이 틀에서는 미중 간의 대립과 협력이 시계추처럼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미중 세력전이를 대전제로 하면서 보고서는 일본의 대중 전략으로서 ‘통합’(integration)과 ‘균형’(balancing), ‘억지’(deterrence)의 적절한 배합을 주장했다.

사실 정치학적으로 볼 때 통합과 균형, 억지는 쉽게 융합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협력 노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도모하고 중국의 일방주의를 ‘억지’하기 위해 미일동맹과 한일관계 등 여타 국가들과의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상대인 중국과도 협력 관계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강대국 간의 협조체제가 안착되는 ‘통합’을 주도적으로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이 논법은 그러나 일견 궁극적 목표로서의 ‘통합’에 방점을 둔 듯하지만, 사실상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해 ‘억지’와 ‘균형’ 정책을 취할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보고서가 제시한 중국과의 쌍방향적인 ‘통합’은 자칫 중국을 미국 및 일본이 주도하는 세력구조에 편입시키겠다는 의도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도쿄재단의 정책제언은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국력을 정비하고 미일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본 보수진영의 위기인식을 대변하고 있다고 대체로 볼 수 있겠다. 이 같은 인식은 2011년도 『방위백서』에서 중국에 대해 “고압적이라고도 지적할 수 있을 정도로 대응하는 등 향후의 방향성에 불안을 안기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간주한 일본 정부의 중국위협론과도 일맥상통한다.<sup>7)</sup>

일본이 그리는 21세기 중국상은 동시대 일본의 자화상이 될 것이다. 일본인에게 ‘중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곧 ‘일본은 누구인가’라고 묻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이 ‘두려운 존재’로서 중국을 인식하고 자신의 미래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 지금, 이 둘을 상대해야 할 우리는 어떤 자화상을 구상하고 있는 것일까.

7) 日本防衛省, 『日本の防衛』, 東京: 日本防衛省, 2011.[[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11/w2011\\_00.html](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11/w2011_00.html)]